
2024년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

2024. 1.

금 융 위 원 회
금 융 정 보 분 석 원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2023년도 교육실적	2
III . 보완할 점	3
IV . 2024년도 교육운영방향	4
1. 직원 교육권고시간 유연화 및 이사회·경영진 교육 내실화	4
2. 자금세탁방지 교육 질적 수준 제고	5
3.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7
V . 향후 협업 계획	8

〈 용 어 설 명 〉

AML (자금세탁방지) : <u>A</u>nti-<u>M</u>oney <u>L</u>aundering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방지
CFT (테러자금조달금지) : <u>C</u>ountering(Combating) the <u>F</u>inancing of <u>T</u>errorism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및 관련단체와의 거래금지
CDD (고객확인 의무) : <u>C</u>ustomer <u>D</u>ue <u>D</u>iligence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
EDD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 <u>E</u>nhanced <u>D</u>ue <u>D</u>iligence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STR (의심거래보고) : <u>S</u>uspicious <u>T</u>ransaction <u>R</u>eport 	특정 자금이 범죄 활동의 수익이거나 테러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 <u>C</u>urrency <u>T</u>ransaction <u>R</u>eport 	일정금액(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DNFBPs (특정비금융사업자): <u>D</u>esignated <u>N</u>on <u>F</u>inancial <u>B</u>usinesses and <u>P</u>rofessions 	변호사, 회계사, 기타 독립적 법률 전문가,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공증인, 보석판매업자, 신탁 및 회사 설립 서비스 제공자 등

I. 추진배경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이하 'AML' 또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을 위한 예방조치의 핵심
 - AML제도의 성공여부는 고객과 창구에서 접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보고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제도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AML 제도 이행에 필수적 요소
 - 이를 고려하여 美 등 선진국 금융당국도 '지속적 임직원 교육'을 AML 의무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Five pillar)*로 지정
 - * AML 교육, 보고책임자 지정, AML 시스템 구축, 위험평가, 독립적 감사
 - 특히, 최근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자금세탁범죄의 고도화 등에 따라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
-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등 의무이행기관·민간 교육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교육·연수를 지원
 - * 금융·보험·여신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KRX 준법감시협의회 등
 -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정책방향을 수립·발표하는 등 교육정책 총괄 기획·관리 역할 담당
 - 교육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민간교육전문기관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ML/TF 리스크 출현·美 중심의 AML 규제 강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교육정책도 유기적으로 운영할 필요

➡ '23년 교육실적, 제도이행평가·AML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24년 교육운영방향 수립

II. 2023년도 교육실적

■ 자금세탁방지 교육권고시간 적정화,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실적은 양적으로 크게 개선

□ (교육대상) '23년 금융권 AML 교육실적*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이사회·경영진 대상 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측면

*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업권 3,700여개사 기준(1분기-3분기)

○ 일반 직원의 경우, '23년도 교육권고시간(6시간)을 상회하여 직원 1인당 평균 7.0시간의 교육 이수

- 다만, 교육권고시간이 임직원별 직위·담당업무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지적도 존재

○ 이사회·경영진의 경우, '23년도 교육권고시간에 못 미치는 평균 3.1시간(이사회), 4.2시간(경영진)의 교육 이수

□ (전문교육) 민간교육전문기관(금융·보험·금투·여신 연수원)에서 운영한 교육의 이수자는 '22년(총 4.4만명) 대비 약 20% 증가한 5.3만명

○ 권고시간 상향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집합 교육수요와 사이버 교육수요가 모두 큰 비율로 증가*하여 교육 이수자 증가를 견인

* [집합교육] '22년 2,477명 → '23년 2,877명 / [사이버교육] '22년 4.2만명 → '23년 5.0만명

< 민간교육전문기관별 사이버교육 수강자 추이 > (단위: 명)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여신연수원	금투교육원
'22년	16,227	21,783	2,285	1,505
'23년(~11월)	21,148(+30.3%)	20,433(△6.2%)	4,840(+111.8%)	3,215(+113.6%)

□ (전문자격) 국내자격증을 중심으로 전문자격 취득수요도 증가 추세

< AML 전문자격별 취득자 추이 > (단위: 명)

	CAMS	KCAMS	AML 핵심요원(기초)	AML 핵심요원(전문)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22년	1,334	31	5,159	622	729
'23년(~11월)	828(△37.9%)	未시행	7,021(+36.1%)	690(+10.9%)	908(+24.6%)

III. 보완할 점

■ AML 교육권고시간 유연화, 이사회·경영진 교육 내실화, 교육품질 관리,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등 개선 필요사항 제기

- ① **확일적 교육권고시간**과 **미흡한 이사회·경영진 교육**으로 인해 AML 교육의 실효성·제도이행 효과성이 저해될 소지
 - 직원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등에 따라 적절한 교육권고시간이 달리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이사회·경영진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인만큼 양적·질적으로 내실화해 나갈 필요
- ② 양질의 교육 이수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자체교육 비중·이해도 점검 여부** 등 교육의 **질적 요소**를 제도이행평가에 반영할 필요
 - 금융회사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교육 없이 쏠 금융사에 공통된 내용을 다루는 외부교육만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사례 존재
 - 임직원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로 특화된 자체교육을 외부교육과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
 - 교육품질이 실적 인정비율 등에 반영되지 않아 수료가 용이한 강의에 수요가 집중될 우려 제기
- ③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
 -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취득비용이 저렴하고 AML 실무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 순환보직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특성상 충분한 업무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해 내부 전문가 양성이 미흡*

* 4대 시중은행 중 3개사의 '본점 AML 직원 중 3년 이상 전담경력자 비율'이 50% 이하

IV. 2024년도 교육운영방향

1 직원 교육권고시간 유연화 및 이사회·경영진 교육 내실화

① 직원 교육권고시간 유연화(1인당 최소 6시간 → 1인당 평균 6시간)

□ **직원**에 대한 AML 교육권고시간을 1인당 '**최소**' 6시간에서 '**평균**' 6시간으로 **유연화**

① (권고시간) 금융회사는 교육권고시간 총량*(직원수 × 6시간)을 각 직원에게 배분하여 직원별 교육권고시간 결정

* (예시) 직원이 1,000명인 저축은행 → 6,000시간을 1,000명에 배분

- 직원 1인당 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시간 배분

- 매년 1분기에 이사회·경영진 승인하에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결정하고 문서화해 보존(필요시 이행평가지 증빙자료로 징구)

② (배분기준) 권고시간은 직원별로 수행하는 AML 업무의 중요도·난이도·책임성 등에 비례적이고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함

③ (이행평가) 금융회사등이 자율적으로 배분한 직원별 권고시간을 기준으로 권고시간 이수여부 판단

- 제도이행평가지 교육권고시간 총량 대비 교육권고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직원의 권고시간 총량을 절대평가*

※ (예시) 직원이 10명이고 교육권고시간이 3명은 13시간, 7명은 3시간인 경우
전자(3명)만 교육을 각 13시간 이상 이수時 ⇒ $\frac{39}{60} = \frac{(13\text{시간} \times 3\text{명})}{(6\text{시간} \times 10\text{명})}$

< 교육권고시간 조정 전·후 비교 >

▶ '23년 교육권고시간			▶ '24년 교육권고시간		
구분	산정기준	평가방식	구분	산정기준	평가방식
이사회	최소 6시간	상대평가	이사회	최소 6시간	절대평가
경영진	최소 6시간	상대평가	경영진	최소 6시간	절대평가
직원	최소 6시간	상대평가	직원	평균 6시간	절대평가

② 이사회·경영진 AML 교육 내실화

- 이사회·경영진에 대한 AML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이행평가) 1인당 최소 6시간의 교육권고시간 및 현행 제도 이행평가 지표는 유지*하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
 - * 업무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임원間 교육시간 차등을 두기 어려운 측면
 - 교육실적 점검·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이사회·경영진 교육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검사대상 선정시 활용
 - (강의개발) 민간교육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검사·제재례 등을 중심으로 이사회·경영진에 특화된 교육강좌 개발·운영
 - AML 최근 동향 등을 반영하여 매년 강좌 업데이트 진행

2 자금세탁방지 교육 질적 수준 제고

① 제도이행평가지 금융회사 내 자체교육 비중 반영

- 금융회사등에서 구축·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체계가 실제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교육*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
 - * ①개별 금융사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②해당社 AML 시스템에 특화된 교육
 - 직원(이사회·경영진 제외) 자금세탁방지 교육실적(실적시간기준)의 최소 10% 이상*은 자체교육으로 실시('24년 이후 실적에 적용)
 - * [산식] (직원 자체교육 실적시간) ÷ (직원 교육 실적시간) ≥ 10%
 -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 교육실적 지표 취득점수의 90%만 인정

② 이해도 점검 여부에 따라 실적인정비율 등 차등화

□ 제도이행평가시 **이해도를 점검**하는 교육의 경우 전달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실적 인정비율을 보다 상향하여 적용

① (이해도 점검) 이해도를 점검하는 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교육시간 대비 각 150%, 120%의 실적시간 인정

② (이해도 未점검) 이해도를 점검하지 않는 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교육시간 대비 각 120%, 100%의 실적시간 인정

< 교육실적 인정비율 조정 전·후 비교 >

▶ '23년 교육실적 인정비율

교육형태	이해도 점검 有	이해도 점검 無
집합	120%	
사이버	100%	

▶ '24년 이후 교육실적 인정비율

교육형태	이해도 점검 有	이해도 점검 無
집합	150%(+30%)	120%
사이버	120%(+20%)	100%

③ (점검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해도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 상향된 실적 인정비율 적용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실적에 상향된 인정비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지표값을 허위입력하는 경우 해당 지표 점수 未부여

< 이해도 점검기준 >

- (문제수) 교육시간당 3개 문항 이상 출제(다만, 10시간 이상 교육의 경우 30문항)
- (난이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에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출제
- (수료기준) 전체 배점 대비 최소 60% 이상 득점한 경우에 수료로 처리
- (응시횟수) 문제를 기존과 다르게 출제하는 경우에 재응시 허용
- (공유제한) 사이버 강의의 경우 응시자별로 문제·보기를 다르게 구성

□ 이해도를 점검하는 교육실적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직원 교육실적 지표 취득점수의 90%만 인정*('24년 이후 실적에 적용)

* 이사회·경영진은 해당 규정 未 적용, [산식] 자체교육 관련 산식과 동일

3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1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시행

* TPAC : Test of Proficiency in AML/CFT(이하 TPAC)

- ☐ AML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의 **자격시험**을 도입·시행하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운영계획) 금융연수원이 주관하여 '24.6월 제1차 시험 시행
 - (응시비용) 일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충분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의 응시비용 책정
 - (평가내용) ①국제기준 및 국내법·제도에 대한 이해, ②자금세탁방지 실무역량을 각 50%씩 평가
 - (평가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他 자격증에 준하여 제도이행평가시 가점 등 반영

2 금융회사등 내부 전문가 양성 지원

- ☐ 제도이행평가시 전문가 양성실적에 AML **업무경력**을 반영해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내부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 제공
 - AML 전담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전문가 자격점수를 20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0%, 1년 미만인 경우 120% 인정
- * 자금세탁방지 업무 외 他 업무를 겸임한 경력기간은 50%로 산정
- 다만, 평가대상기간에 AML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한정하여 상향된 자격점수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 업무경력 및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 AML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도록 유도

V. 향후 협업 계획

- 「금융회사·업권별 협회 등 - 민간교육전문기관 - 검사수탁기관·금융정보분석원」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운영
 - (금융회사등) 직원별 교육권고시간 결정 후 자체 교육계획 수립·이행
 - (업권별 협회 등) 회원사·단위조합 등 교육실적 점검 및 독려,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FIU에 현장의견 전달
 - (민간교육전문기관) 자금세탁방지 부문 교육·연수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하고 자격제도 유지·관리
 - (검사수탁기관) 금융회사등 이사회·경영진 교육실적 등 점검

< 세부과제별·기관별 협업계획 >

세부과제	주 체	협조사항	시 기
1-① 직원 교육권고 시간 유연화	금융회사등	- 직원별 권고시간을 배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교육계획 수립·이행	상시
1-② 이사회·경영진 교육 내실화	전문교육기관	- 이사회·경영진 대상 특화강의 운영	상시
2-① 자체교육 강화	금융회사등	- 금융사 內 자체교육과정 개발·운영	상시
2-② 이해도 점검 교육 강화	금융회사등	- 이해도 점검이 포함된 교육과정 이수	상시
3-① TPAC 도입·시행	금융연수원	- TPAC 교재 개발·출판	~3월
		- TPAC 자격시험 시행	6월
3-② 내부 전문가 양성	금융회사등	-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관리	상시